

##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 차질 없이 완료한다

### 12일 54차 대대 속회, 연수원공사비 추가 승인 ... 공사비 증액 관련 조사키로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노조는 시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부별 1인 참가보장, 공사비 검증 외부기관 진상조사위 선정 등의 내용을 중집에서 논의해 구성한다. 노조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했던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3월 12일 속회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대대를 소집해 노조 11기 2년차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 안건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을 논의하던 중 회의 성원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대 휴회를 선언했다.

노조 54차 대대 산회와 속회 근거는 노조 회의 규정 8조(의장의 의무) 8항과 같은 규정 33조(산회 후의 절차) 등이다. 회의 의장은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면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 대의원들은 12일 다시 연 54차 대대에서 교육연수원(아래 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연수원 부가세 환급분 545,938,250원과 이후 발생할 부가세 환급분을 건축비용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현재 연수원을 비영리법인 사업체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노조 대의원들은 더불어 연수원 공사비 2,525,123,000원을 추가하기

로 했다. 공사비 증가는 옹벽·보일러 공사, 도로개설, 실내장식 부분 등에서 발생했다. 이 비용은 쟁의적립금에서 빌리고 특수목적기금으로 메꾼다. 쟁의적립금 차용금액이 늘어난 만큼 특수목적기금 상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더 늘렸다.

연수원 사무집기와 침구류 구입비는 이번 대대에서 처음 논의했다. 이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수원 건립기금 사용을 의결한 48차 대대(2019.5.20)에 노조는 공사비 부분만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사무집기류 구매 비용은 공사 완료 시점에 여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성배 69번 대의원은 “공사비용 절감에만 급급하다가 행정대행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은 채 조합에서 연수원 건립의 모든 과정을 맡아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공사비 증액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연수원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 불가피하니 공사비 추가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이성배 대의원은 “3월 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단양 연수원 공사 현장을 들렀다. 눈으로 보니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라고 덧붙였다.

반대 발언에 나선 하상수 454번 대의원은 “쟁의적립금을 원래 목적과 무관한 연수원공사비로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공사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데 이후 연수원 운영은 어떻게 하나갈지 우려된다.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은 뒤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412명 중 346명이 찬성했다. 찬성률 83.0%로 연수원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차질 없는 연수원 건립과 공사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겠다”라며 “연수원 공사 첫 삽을 뜬 위원장으로서 완공까지 온전히 책임지겠다.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2021년 중앙교섭 등 임단투 출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 전달 ... 산업전환협약 쟁취 최우선 목표

금속노조가 3월 10일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에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며 올해 교섭 일정을 시작했다. 노조 각 지부·지회는 3월 12일 요구안을 사측에 전한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월 13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도 촉구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을 요구안을 전달하며 “산업전환에 따라 여러 업종에서 고용문제를 넘어 회사 존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사용자협의회 존립과 연동돼 있다” 라면서 “산업 전환기 노사 간 눈높이를 맞추

는 2021년 중앙교섭이 되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전환기 노사공동의 과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며 “산업전환에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텐데 노사가 어떻게 부담할지, 사용자 측이 수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응답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을 내세웠다.

협약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

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지는 안을 제출했다.